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지침

<최종공포일 2022.4.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윤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확정"이라 함은 최종조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윤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연구진실성 확보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성과전략실을 처리담당부서로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고, 조사대상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이의신청 및 처리, 확정 및 보고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본조사의 개시 시 처리담당부서는 조사계획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 ① 처리담당부서는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통보받은 경우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부서는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착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 의심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사안 발생 부서의 직할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 3인 이상의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직할부서장이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타 직할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에는 사안이 발생한 직할부서 이외의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 간사는 사안 발생 부서의 연구지원부서장(또는 직할부서내 선임부서장)이 되며, 예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회의록, 기타 관련 자료 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위원회 운영)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위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자의 자료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4.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실로 확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⑥ 예비조사위원회 운영경비는 해당 연구지원부서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의 확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조사를 진행한다. 단,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조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 의심행위 유형, 고의성 및 중대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본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1인 이상)
- 2.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 ③ 간사는 기획본부 사업전략부장이 되며, 본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회의록, 기타 관련자료 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본조사위원회 운영)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성과전략실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연구윤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실시 통보를 받은 처리담당부서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처리담당부서는 재조사가 완료된 때 연구윤리위원회에 재검토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보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 확정 전에 조사위원 후보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1. 비밀준수 서약서
2. 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3. 후보자 정보공개 동의서

③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후보자 명단을 제공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또는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친 조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확정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조사위원 및 처리담당부서는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내용, 처리결과 등을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2022.04.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지침에 따른 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